도, 항공우주 · 생활 SOC 동시 공모 대응 나서

무주 항공우주산업 · 정읍 문화공간 등 전략사업 추진 위한 지역개발 공모 총력… 국비 확보 · 지역 활력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앞두고 국비 확보와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 체제를 가동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지원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투자선도지구'와 주민 밀착형 인프라를 공급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투자선도지구는 전국 5개 내외, 지역수요맞춤지원은 15개 내외를 선정한다.

도는 낙후 지역의 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청년 인구 유입을 목표로, 시군 및 전문가 그룹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신청서 완성도를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지역개발사업 최종 선정 결과는 투자선도지구가 6월 말, 지역수요 맞춤지원이 7월 중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투자선도지구 분야에서는 '무주 항공·우주산업'을 전략 과제로 내세웠다.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일원 약 32만 평(106만 8,512㎡)에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총 3,488억 원(국비 100억·지방비 354억·민자 3,034억)을 투입해 종합 항공우주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대형 사업이다.

연결도로 4.3km(터널 1.2km) 개설과 상하수도 시설 확충이 핵심 기반 인프라로 추진되며, 선정 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73종의 규제특례 혜택도 부여된다.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적 변수는 앵커기업 확보다. 도는 지난 3월 ㈜현대로템과 3,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하며 엔진 생산·연구시설 구축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국토연구원 등 관계 분야 전문가로 자문단을 꾸려 국토부 사전컨설팅에서 제기된 검토 의견을 정밀 보완했으며, 지난 27일 최종 공모 신청을 마쳤다. 앞서 2025년도 공모에서는 '전주 MICE 복합단지 조성사업'과 'KTX 남원역세권 개발사업'이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된 바 있다.

지역수요맞춤지원 부문에는 정읍·남원·장수·부안 4개 시군이 참여한다. 정읍시는 정읍역~연지교 일원 1만 8,679㎡에 복합문화공간과 레트로 거리가 어우러진 문화역사의 거리(76억원)를 조성하고, 남원시는 대산면 수덕리에 소각시설 폐열을 활용한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30억원)를 추진한다.

장수군은 대곡 논개관광지 내 도깨비전시관을 대형 테마 숙소와 공중보행데크를 갖춘 복합 체험 공간으로 리모델링(33억원)하고, 부안군은 서외리 일원에 문화·생태·역사가 어우러진 매창 문화광장(45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4개 시군 모두 6월 27일까지 공모 신청을 마무리한다.

도는 이번 공모에서 최소 2건 이상 선정으로 60억 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해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신성장 동력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2025년도에는 장수군 '방화동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과 정읍시 '새암달빛광장 조성사업'이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최정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공모는 전북의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무주 투자선도지구는 대기업 유치와 첨단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을 동시에 실현할 핵심 사업인 만큼, 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최종 선정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 '데이터활성화 전략위원회' 출범

AI · 빅데이터 활용 확대… 데이터기반 행정혁신 · 산업육성 본격화

공공데이터 개방 · 가명정보 활용 통해 전북형 데이터 생태계 조성

전북도가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과 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활성화 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전북형 데이터 생태계 조성에 본격 나섰다. 도는 28일 전북디지털융합센터에서 AI·빅데이터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도 데이터활성화 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해 공공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 기업의 데이터 활용 기반 확대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형 데이터 개방·연계체계 고도화 △가명정보 활용 확대 △데이터 산업 육성 △안전한 데이터 활용환경 조성 등을 중심으로 데이터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참석 위원들은 데이터가 정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데이터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특성과 산업 수요를 반영한 데이터 활용 전략과 AI 기반 서비스 확대, 데이터 신뢰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전략위원회는 앞으로 도의 데이터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방향 설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민간데이터 연계 활성화,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 과제 발굴은 물론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데이터 산업 육성 전략 마련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전북형 데이터 거버넌스 강화 기능도 맡는다. 도는 앞으로 행정·산업·생활 분야 전반에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AI·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발굴과 기업 지원을 통해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기업,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데이터 기반 지역 혁신 모델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 사전투표 혼선 차단 '총력 대응'

지원금 창구 · 사전 투표소 동선 분리로… 도민 불편 최소화

안내요원 배치 · 혼잡관리 강화… 안전한 민원 운영 점검

전북자치도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장의 혼선을 차단하는 등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이날 전주시 중화산1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창구 운영 상황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준비 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전북자치도는 29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 기간 동안 주민센터 방문 인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과 민원 혼잡 관리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지원금 신청 방문자와 사전투표 참여 인파가 동시에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동선 분리 및 안내체계 정비에 중점을 두고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도는 민원인과 투표 참여자의 이동 흐름을 분리하고 안내 유도선을 명확하게 설치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대기 공간 확보 여부와 비상상황 대응체계, 혼잡 시간대 운영 계획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며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사전투표는 모두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행정 서비스"라며 "도민 누구나 불편 없이 안전하게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와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28일 전주시 중화산1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도민 120만2,9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추진되며, 27일 기준 지급률은 89.2%를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사용 기한인 8월 31일까지 지원금 소비를 독려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선순환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선관위 위원장, 사전투표 준비상황 최종 점검

개선된 '관내사전투표함 받침대' 등 집중 점검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 위원장 김상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사전투표 준비상황에 대한 최종 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한 전북선관위 김상곤 위원장은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의 보관장소를 살펴보고, 실시간 CCTV 녹화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다. 이어, 덕진동 사전투표소(전주실내체육관)로 이동하여 실제 신분증으로 모형 투표용지를 발급해보며 사전투표운용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개선된 '관내사전투표함 받침대'도 면밀히 점검했다. 투명한 재질로 제작한 '관내사전투표함 받침대'는 '투표함 바꿔치기' 등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개선됐다.

또한 사전투표소 내·외부를 둘러보며 선거인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선거사무를 위해 노력하는 사무원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표했다.

한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실시되며, 투표함 보관상황은 도선관위 청사 입구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누구든지 24시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별취재반

"현금 살포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전북발전연합회 등 시민단체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연합회(회장 최한양) 등 시민단체 회원 10여 명은 2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기된 선거 관련 현금 제공 의혹에 대해 전북경찰청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한양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연합회 회장은 "지방자치선거는 지역 발전과 주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정책 중심의 건강한 경쟁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선거 과정에서는 정책 경쟁보다 과도한 비방과 갈등, 일부 폭력적 행위 등이 반복되면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보다 엄정하고 공정한 자세로 선거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체 측은 최근 불거진 현금 제공 논란과 관련해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욕설과 폭력, 집회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배후 여부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도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서는 무소속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를 향한 공개 질의도 이어졌다. 단체 측은 "현금 제공 경위와 대상, 총액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며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연합회 등 시민단체 회원 10여 명은 2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기된 선거 관련 현금 제공 의혹에 대해 전북경찰청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이 정치적 논란으로만 소비되기보다 공정한 수사를 통해 객관적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북경찰청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들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해 정치권과 관계기관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진보당 도당 "변화의 열망 투표로 보여달라"

사전투표 앞두고 도민께 호소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전권희)은 28일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전북도민들에게 호소문을 발표하고 "멈춰 선 전북, 이대로는 안 된다는 변화의 열망을 투표로 보여달라"며 "일당 독점을 견제할 대안 정당인 진보당을 키워달라"고 밝혔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전북 지방선거는 정책과 미래가 실종된 선거가 되고 있다"며 "도지사 선거마저 친청·반청 구도의 중앙정치 대리전으로 변질됐고, 사상 초유의 무투표 당선까지 겹치면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실종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오만한 일당 독점 정치 속에 주민의 삶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선거 때만 고개 숙이고 끝나면 외면하는 기득권 정치가 전북의 정체와 소멸 위기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민 위에 군림하는 오만과 무책임의 정치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견제와 균형의 정치가 복원될 때 전북 정치가 도민을 두려워하고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또 "선거운동 기간 거리에서 시민들이 후보들의 손을 잡아주며 변화를 향한 열망을 보여줬다"며 "보내준 격려와 응원에 힘입어 전북 정치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말보다 실천으로 주민 곁에서 민생정치를 준비해 온 기호 5번 진보당 후보들을 선택해 달라"며 주요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진보당은 백승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에 대해 "밤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무너진 삶과 서민경제를 책임질 후보"라고 소개했으며, 강성희 전주시장 후보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며 검증된 추진력으로 전주 변화를 이끌 후보"라고 강조했다.

또 오은미 순창군수 후보에 대해서는 "밭 직불금 제도를 만든 실력으로 전북 최초 여성 군수가 되어 순창의 변화를 만들 후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손진영 익산시의원 후보, 김금주·여민영·최한별 전주시의원 후보 등에 대한 지지도 호소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비례대표 선거와 관련해서도 "민주당 한쪽 날개만으로는 전북이 더 높이 날 수 없다"며 "진보라는 또 하나의 강력한 날개를 달아달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지방선거 혼란 초래 정청래 대표, 선거 일선 물러나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각종 비위 · 도덕성 문제로 징계 받은 인사 공천… 유권자 우롱"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공동대표 김남규·김영기·박경기·윤찬영·이강주)는 28일 성명을 내고 "지방선거를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선거 일선에서 물러나 자숙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전북지역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도민의 상식과 기대를 철저히 배신했다"며 "각종 비위와 도덕성 문제로 징계를 받은 인사들을 공천해 지역 유권자를 우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 예산 착복 문제로 전주시의회에서 징계를 받은 전윤미 전주시의원과 지역복지 보조금 유용 문제로 전주시의 징계를 받은 장애인단체 유시선 대표 등을 공천한 것은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책임과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포기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 "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도민의 선택권을 사실상 박탈한 채 특정 후보를 밀어붙이며 민주적 절차를 훼손했다"며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으면 지역발전이 어렵다는 식의 정치적 겁박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랜 기간 민주당을 지지해 온 전북도민을 존중하기보다 민심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현재의 지지 호소 역시 겁박에서 읍소로 형식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선과 공천 과정에서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찾아볼 수 없고 사과 의사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전북 발전에 대한 진정성 있는 비전과 책임보다는 지역 정서에 기대 선거를 치르려는 구태정치만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지방선거를 혼란과 갈등의 장으로 만들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훼손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히 정청래 대표는 무자격 후보들을 대거 공천해 지방선거 전체를 난장판으로 만든 데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가 진정 민주당과 지방자치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선거 일선에서 물러나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그것이 도민들이 보내준 성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전북자치도, 양파 수급안정 총력… 현장점검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양파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산지 현장을 찾아 수급 상황 점검과 유통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28일 부안군 동진면에 위치한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최근 양파 수급·출하 동향을 점검하고 신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 계획 등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부안마케팅은 2002년 설립된 산지유통조직으로 수박·양파·토마토 등을 중심으로 공동선별과 통합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총 취급액은 986억 원으로 지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최근 양파 가격 하락에 따른 산지 어려움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이만호 기자